

Vol. 40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18. 10. 8.

■ 정책동향

-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 제1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개최
- 주민참여와 혁신성장(일자리) 중심 권역별 워크숍 개최
-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최
-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창구 전국으로 확대
-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배양육 관할권 조정 필요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글로벌 식품 포럼 주요 내용: 유럽연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정책 과제 등
- 언론 동향 |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 우려

■ 통계·조사

- 토양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정책동향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자료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2018.10.4.)

□ 개요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10.4.]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이 안건으로 **상정·의결**

▮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

목표	◆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로 제조업 고용활력 회복	
기본 방향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투자·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주도 • (정부) 일자리창출 Support Tower로서 민간투자 뒷받침(마중물 역할)
	맞춤형 애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투자애로 해결, 시장 창출 지원 및 투자 주체의 핵심역량 제고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의 과실이 중소·중견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구축
추진 분야	주력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차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IoT가전
	신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신산업 • 바이오 · 헬스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
- [추진방향] 우리의 제조 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망 분야***(5개)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 생태계 강화**에도 주력

㉔ 정책동향

※ (주력산업 분야: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

※ (신산업 분야: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현황]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 원 규모) 발굴

■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창출 계획(~2022년) ■

구분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계
프로젝트	19건	15건	9건	71건 (건설) 65+공공기관/軍 (스마트에너지) 4건	27건	140여개
투자	5조 원	96조 원	8.2조 원	12.8조 원	2.7조 원	124.9조 원
일자리	4,600개	1.1만 개	1.1만 개	6.1만 개	4,800개	9.2만 개

- (일자리 효과)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2만 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 개 등 2022년까지 10.7만 개 창출 전망

※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의 합산(파생되는 간접 고용은 미포함)

■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9.5만 개 ■

구분(프로젝트수)		2018년	2019년	2020년~2022년	합계
미래차 (19)	전기차(11)	50여개	380여개	250여개	690여개
	수소차(5)	20개	20개	1,440개	1,480개
	자율주행차(3)	480개	480개	1,440개	2,400개
	소계	550여개	880여개	3,130여개	4,570개
반도체·디스플레이(15)	반도체(10)*	1,040개	2,160개	4,340개	7,540개
	디스플레이(5)	1,100개	1,500개	1,100개	3,700여개
	소계	2,140개	3,660개	5,440개	11,240개
IoT가전(9)		1,830개	2,320개	6,400개	10,550개
에너지신산업 (71)	재생에너지(67)	3,040여개	9,570여개	47,370여개	59,990여개
	스마트에너지(4)	220개	260개	720개	1,200개
	소계	3,260여개	9,830여개	48,090여개	61,190여개
바이오헬스(27)		1,170개	1,260개	2,340개	4,770개
계(141)		8,960개	17,950여개	65,400여개	92,320여개

※ 2018년 이전 착공 또는 2020년 이후 완공 프로젝트 포함

■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 개 ■

지원정책	2018년	2019년	2020년~2022년	합계
신산업 R&D 투자*	810여개	1,860여개	5,810여개	8,490여개
보급 등 기타**	1,280여개	1,290개	3,870개	6,440여개
계	2,100개	3,150여개	9,680여개	14,940여개

※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 중 신산업 투자비중 확대 추진 [(2018년) 30%(0.9조 원) → (2022년) 50%(1.5조 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非R&D), 자동차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㉔ 정책동향

<분야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1. 미래차

- [미래차]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

⇒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 원 투자 계획

-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 창출***

※ 전기차/수소차 보급(누적): (2018년) 5.6만 대 / 923대 → (2022) 35만 대 / 1.6만 대

※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2018) 3.1만 대 / 746대 → (2019) 3.3만 대 / 2,000대

-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하여 충전 불편 해소(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 기, 310기 구축)

※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2019.上), 국공유지 內 설치 시 임대료 감면(2019.上) 등

※※ 수소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생산 → 운송 → 충전소 설치 등 단계별 규제 일괄 개선(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 운반차량 압력기준 상향 등 4건, 2018.9.~2019.1Q)

※※※ 전기차 충전사업자 수: (2017) 20개 → (2022 전망) 100개 / 수소충전 민간SPC 설립 예정(2018.11.)

※ 미래차 관련 보조금(2019년 정부안): 5,383억 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2018, 3,523억 원 → 2019, 4,573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2018, 186억 원 → 810억 원)]

2. 반도체·디스플레이

- [반도체·디스플레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 (예) S社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상수원 입지 인허가 2018.9월 완료 → 연내 착공 예정

⇒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 투자 계획

㉔ 정책동향

3. 사물인터넷(IoT) 가전

- [사물인터넷(IoT) 가전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하여 실증 지원 강화

※ 공동주택비율(2016): 한국 75%, 미국 35%, 일본 10% / 국내 인터넷보급률: 99.2%

⇒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 원 투자 계획

- 이를 위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

※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 조성

※※ 에너지관리 서비스(2019~2021) → 사회·복지 서비스(2020~2022)(맞춤형 방법, 노인 돌보미 등)

4.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 밀착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조기 창출 유도

※ 주민수용성 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법령 개정 不要 적극적 행정행위) 적용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60여개 프로젝트 적용 검토): (기존 1~2년 → (개선) 6개월

※※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 연장(최대 8년 → 20, 연내),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최대 10년 → 20, 연내) 등 3건

※※※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발전사업허가 前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9년 전기사업법 개정)

※※※※ 계통연계 취약지역 공용접속망 확충(한국전력공사)

⇒ SPC, 발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67개 프로젝트(65개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 + 軍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9.8조 원 투자 계획

-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증 등 지원 추진

※ 국민 DR시장 참여요건 엄격(최소 의무감축용량 2MW) 》 4인 가족 평균 전력사용량 0.35MW) → 최소 의무감축용량 축소(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2019.2Q)

⇒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VPP시스템 구축·운영, 국민DR, ESS 등), 3조 원 투자 계획

㉔ 정책동향

5. 바이오·헬스

- [바이오·헬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에 중점

⇒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7조 원 투자 계획

-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
 - ※ 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외부에는 통계적 분석결과만 제공하는 방식
 - ※※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명확한 구분기준 제시(2019.上),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항목 확대(2018.4분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심의 후 고시개정 추진)
 -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비즈니스 창출(100건) 및 실증(25건) 지원
-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도입(2019)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 확대

<상생생태계 활성화 지원>

- [상생생태계 활성화 지원]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적극 지원

분야	주요 내용
미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내연기관 협력사의 전기·수소차 부품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295억 원 → (2020~) 1,800억 원(에타 진행 중) • 자율차 생태계 조성: 9대 핵심부품 국산화(~2021, 1,45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중소·중견기업 참여
반도체·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양산라인 테스트베드 활용: 中企 소재·장비 성능평가 지원(500건, ~2022) → 200개 이상 국산 장비·소재 Track record 확보 • 상생펀드(1.4조 원) 조성·지원
IoT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 2022년까지 1,000개 중소·중견 가전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플랫폼 개방 대기업 확대(現 1개 → 5개社, 2018년 말) • 중소기업·부품사 기술개발 지원(1,063억 원,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가전, IoT 센서·소자, 홈서비스 로봇 등
에너지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풍력 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단가저감형(태양광), 기술추격형(풍력) R&D / (중장기) Post-실리콘, Multi-type 터빈 등 차세대 혁신제품 ※ 재생에너지 R&D 예산: (2018) 2,079억 원 → (2019 정부안) 2,179억 원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 보유 혁신신약 기술(IP)의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선도형 바이오 IP경쟁력 강화 촉진사업(에타 진행 중): 2020~2029, 7,800억 원

㉔ 정책동향

- [향후 계획]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

※ 2019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 추진

※※ 프로젝트 지원 관련 정부사업(30개)의 2019년 예산규모가 2018년 대비 30.6% 증가(1조 7,726억 원, 정부안 기준)

▣ 과제별 추진일정(안) ▣

분야	추진 과제 및 조치 필요사항	소관	일정	
미래차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환경부	~2022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환경부 보조금 지침 개정)	환경부	2019.1Q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상향(환친차법 시행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20	
	우편배달용 초소형전기차 1만 대 구매	우정사업본부	~2020	
	수소충전소 투·융자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2019.2Q	
	R&D·시범·실증사업	전기·수소차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수소 시내버스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202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2018~
		자율주행 핵심부품 R&D사업(1,45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2021
		범부처 국가프로젝트를 통한 자율차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2019~
		자율차 테스트베드 구축(화성 K-CITY, 산양법 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2018~
		전국 고속도로 정밀맵 및 주요노선 스마트도로 구축	국토교통부	~2022
	규제·제도 개선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마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특례고시)	산업통상자원부	2018.9.
		적정 수소가격 분석·산정을 위한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8~
		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2018.4Q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대량발주 허용	환경부	2019.1Q
		충전기 옥외광고 허용(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2019.1Q
		충전기 공공유지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2019.2Q
		수소 운반차량 용기용량 및 압력기준 상향(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019.3

㉔ 정책동향

분야	추진 과제 및 조치 필요사항	소관	일정	
	개질기-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완화(고압가스법 상세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2019.1Q	
반도체·디스플레이	애로지원	정부합동지원반 One-stop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계속
	상생생태계	대기업 양산라인 활용 중소기업 성능평가 및 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상생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가 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2019
	R&D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7,5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2029
		반도체 Alliance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2018.11.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반도체협회 전자부품연구원	2018.7.	
IoT가전	규제·제도 개선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안) 마련(관계부처 실무협의체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2018.12
	R&D·시범·실증사업	IoT가전 스마트홈 1만 세대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2018~2022
		IoT가전 결합 홈서비스로봇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2
		IoT가전 및 핵심부품(센서·소자 등)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2
		IoT 플랫폼 표준화 지원(민·관 협의회 발족)	국가기술표준원	2018.4Q
	상생생태계	스마트홈 융합 얼라이언스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 확대	전자진흥회	2018.4Q
		IoT가전 빅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구축·운영	산업통상자원부	2018~2021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전자부품연구원	2018.9.
		실버헬스가전 지원센터 지원(19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3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애로지원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규제·제도 개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상 재생에너지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즉시
		염해간척농지 일시 사용기간 개선(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18.12.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 기간 연장(신재생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8.12.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공유수면법 시행령 등 개정)	해양수산부	2018.12.
		전력중개거래 허용(전기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8.12.
		DR시장 참여요건 완화(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2019.2Q
	R&D·시범·실증사업	태양광·풍력 R&D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계속
		도로일체형 태양광 시범·실증(2017~2020)	산업통상자원부	2020.2Q

㉔ 정책동향

분야	추진 과제 및 조치 필요사항	소관	일정	
	서남해 해상풍력에 국산 탄소블레이드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2019.4Q	
	5MW 국산터빈 해상 실증(2018~2021)	산업통상자원부	2018.6.~	
	저가형 ESS 제조센터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2018.12.	
	P2G, V2G 대규모 실증사업	산업통상자원부	2019.1.	
	수요창출	BIPV 가중치 상향(에너지공단 지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8.4Q
		BIPV 설치 시 보조금 우선지원(사업 공고 시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2019.1.
바이오·헬스	R&D·시범·실증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의료 데이터 표준화)	~2020
			전주기적 신약 개발 지원(1조 원 예타)	2020~2029
			글로벌 선도형 바이오 IP 강화 촉진(7,800억 원 예타)	2020~2029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시스템 혁신(先사업화이슈 검토)	2018~2022
			AI·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사업(420억 원)	2018~2022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예타사업(3조 원)	2020~2029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 도입(250억 원)	2019~2023
	규제·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	2018.4Q~
			유전자분석 허용항목 확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2018.4Q
			(非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료행위 구분 명확화(의료법 유권해석)	2019.上
	기반구축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1,244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2017~2021

㉔ 정책동향

◆ 총괄정책 동향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자료 : 국회(2018.10.4.)

- [국회,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10.4.]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겸임상임위원회 별도 실시)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실시하고,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
 - ※ 국정감사 대상기관: 전년 대비 50개 기관이 증가한 총 75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70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9개 기관(전년 대비 5개 기관 증가)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9.28.)

- [기획재정부,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9.28.] 최근 경제상황·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 (주요 내용) △고용·투자 등 현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여건 등 점검, △빠른 시일 내 우리경제·고용이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
 - ※ (참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장관들

〈경제현안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고용투자 등 현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 점검〉

- ◆ 거시경제에 있어서는 금년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며, 특히 최근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 고용상황은 9월에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이는 구조조정, 내수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둔화, 정책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논의

〈고용창출력과 경제활력 제고〉

- ◆ 공기업·재정을 통한 경기보강과 함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구조 재편 작업 및 구체적 추진전략의 조속히 마련
- ◆ 산업분야별(교통, 금융 등)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3대 전략 투자 구체화, 미래차·바이오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등 혁신성장 확산·성과 도출
- ◆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 핵심 규제개혁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작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

- (향후 계획)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관계장관들이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10.1.)

- [기획재정부,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0.1.] △2018년 본예산(8월) 및 추경예산(9월) 집행실적, △재정현장 컨설팅 후속조치 등을 논의
 - (최근 경제동향)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수출호조 등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여건은 취업자 위축이 지속*** 되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추세도 유지***
 - ※ 수출액(억 달러): (2018.5월) 508.6 → (6월) 511.8 → (7월) 518.8 → (8월) 512.0 / 소비자심리지수: (2018.7월) 101.0 → (8월) 99.2 → (9월) 101.7
 - ※※ 취업자수(전년 동월 대비, 만 명): (2018.1/4) 18.3 (2/4) 10.1 (7) 0.5 (8) 0.3
 - ※※※ 청년 취업자 수(전년 동월 대비, 만 명): (2018.6월) △4.2 → (7월) △4.8 → (8월) △4.0
 - (대응방향)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시화시킬 필요, 지난 7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관리
 - ※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7.18.) 3.8조 원 + 단기일자리 대책(9.12.) 3.3조 원
 - (집행실적) 총 280.2조 원 중 8월 말 기준 212.8조 원(76.0%)을 집행하여 8월 목표(200.3조 원) 대비 12.6조 원(4.5%p) 초과 달성하였고,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 또한, 2018년 추경예산은 총 3.78조 원(예비비 500억 원 제외) 중 9월 말 3.09조 원(81.6%)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
 - ※ 일자리사업: 관리대상 10.7조 원 중 8.7조 원 집행, 계획 대비 5.1%p 초과 / SOC사업: 관리대상 38.9조 원 중 26.6조 원 집행, 계획 대비 1.7%p 초과

▮ 2018년 8월 집행실적(단위: 조 원, %) ▮

구분	2018년 계획(A)	8월 계획		8월 실적		계획 대비 달성도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금액(C-B)	비율(C/B)	(C/A)-(B/A)
□ 합계	280.2	200.3	71.5	212.8	76.0	12.6	106.3	4.5
중앙부처	238.6	172.8	72.4	183.8	77.0	11.0	106.4	4.6
- 예산	200.9	147.1	73.2	154.3	76.8	7.2	104.9	3.6
- 기금	37.8	25.7	68.1	29.5	78.0	3.7	114.5	9.9
공공기관	41.6	27.5	66.0	29.0	69.8	1.6	105.8	3.8

- (재정현장 컨설팅)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현장 컨설팅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 △9월 말 기준 강원권·충청권 등을 포함하여 총 16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과제 7건*을 발굴,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 (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결과 공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조사 수수료 일부 감면 등

제1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개최

자료 : 청와대(2018.9.28.)

- [제1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개최, 9.28.]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소통 홍보, 여기에 준비통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신설하고, 이행 관련 1)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자, 2)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자, 3)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 후속 조처 마련하기로
 -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 연내 개최를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되어야 함으로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하여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 행사) 10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평양 개최와 관련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
 - (2020년 도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문제) △2020년 도쿄올림픽·남과 북이 어떤 종목에서부터 공동으로 진출할 것인가,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한 예선전부터 함께 남북이 같이 참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2032년 하계올림픽·2032년이면 2021년, 3년 뒤에 남북 공동 유치를 결정지을 수 있어 이 문제를 ICC에 정식 안건으로 조기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대고려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쪽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서 전시하는 방안으로 조기에 공동연락사무소나 문서 협의를 통해서 대북 협의를 바로 진행해 나가기로
 - (이산가족 문제) 10월 중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10월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10.4.)

- [기획재정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10.4.] 판문점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된 가운데, 재정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맞이하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적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

㉔ 정책동향

- 또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 세션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법적 과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국내외 재정법학자들 간 열띤 논의를 진행

▣ 심포지엄 프로그램 ▣

구분	주요 내용
세션 I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재정조직법과 예산법률 •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세션 II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재정관리 및 법제 개선방안
세션 III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통합 공개와 법제 개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중앙 - 지방 재정정보 공개체계 검토 • 공개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법제 개편방향
세션 IV	종합토론 및 마무리

- (향후 계획)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법령 및 재정 제도 운용의 적실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주민참여와 혁신성장(일자리) 중심 권역별 워크숍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8.10.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민참여와 혁신성장(일자리) 중심 권역별 워크숍*’ 개최, 10.2]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을 이끄는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과 협력을 통한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마련 **서울(10.2), 전북(10.8), 대구(10.12)** 지역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
 - ※ (참석자) 시·도 팀장급 이상(혁신·주민참여 업무담당 중심), 권역별 200~300명
 - ※※ (서울) 10.2 서울혁신파크, (전북) 10.8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대구) 10.12 한국뇌연구원
- (추진 배경)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강조,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주민자치·일자리·혁신성장** 등 **주요 혁신 과제**의 **실행력을 주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맞춤형** 주제와 **지역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시·도와 공동 추진
 - ※ (수도권)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호남·경상권) 혁신성장과 일자리
- (주요 내용) 정부혁신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 혁신·주민참여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공유, △세미나·전문가와 관련 연구원이 함께 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혁신**’ 주제 발제 후 지역공무원·전문가 토론 및 발전 방안 제시, △**현장토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지역혁신성장 사례를 소개

㉔ 정책동향

광주·전남지역 정부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자료 : 행정안전부(2018.10.5.)

- [행정안전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전남지역 「정부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10.5.]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정부혁신 추진과정에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
- (주요 내용) ‘내가 경험한 정부혁신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 을 주제로 한 **생생토크**와 광주·전남 지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
 - ※ 생생토크: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주민이 참여·협력한 정부혁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

〈생생토크 참여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소득층 아동을 학습 지도하는 ‘꿈 사다리 공부방’ 학습도우미 대학생 김현혜씨 ②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을 통해 자녀의 등하교 길을 안심하는 학부모 한송이씨 ③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에서 둘째와 셋째를 출산한 다둥이 엄마 이다혜씨 ④ 생활 갈등을 주민 간 대화로 해결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 센터장 민문식씨 ⑤ 장애인의 이동권 환경을 개선하는 ‘무(無)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의 조용호씨 ⑥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괜찮아 마을프로젝트’ 의 흥동우씨

〈광주·전남지역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계 활용, 키즈·실버 어울림센터” (호남지방통계청 및 전남 나주시) ② “시민참여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광주 본청) ③ “워킹맘 가정 자녀돌봄 매칭 프로젝트” (광주 북구) ④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운영” (전남 본청) ⑤ “장성형 안심케어, IoT@엄니 어디가...?” (전남 장성군)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8.10.4.)

-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10.4.] △농산물·석유류 수급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규제 샌드박스 입법 후속조치 계획, △일자리사업 집행 및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점검 논의

㉔ 정책동향

- (농산물)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농산물 대응 방안〉
◆ (감자) 10월까지 시장접근물량(TRQ) 2,600톤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톤을 추가 도입하여 가격안정 을 도모하겠음.
◆ (무) 계약재배물량을 하루 100톤씩 조기 출하 하는 한편, 필요 시 토마토 등 기타 품목의 조기 출하 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 (상추 등) 생육기간이 짧은 상추 등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특히, 행정안전부 와 농식품부 를 중심으로 태풍 콩레이 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 하여 철저히 대비 하겠음.

- (혁신성장)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9.20.)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대표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샌드박스 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일자리) △전 부처는 당면한 고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재정 사업이 마무리절차에 들어가는 **4/4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을 **적극 집행**

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 개최

자료 : 환경부(2018.10.2.)

- [환경부·전라남도·경상북도·경산시 공동, 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 개최, 10.2] ‘청색경제*로 열어가는 지속가능발전 사회’ 라는 주제로 **생태모방기술**을 토대로 **환경오염의 예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
 - ※ 청색경제: 생태계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는 순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경제를 의미함. 예를 들어 1955년 스위스에서 식물 도꼬마리의 가시를 모방하여 작은 돌기를 가진 잠금장치 ‘벨크로(일명 찍찍이)’가 발명된 것이 대표적
- (주요 내용) 생태모방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연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과 국내외 **생태모방기술 전문가의 기조연설 초청강연** 등이 진행
 - ※ 업무협약은 환경부,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산시와 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여, 이들 기관은 생태모방기술개발에 필요한 생태원리 분석과 기술적 응용 연구를 협력할 예정

㉔ 정책동향

〈전문용어 설명〉
<p>〈청색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단순히 환경을 보호의 차원을 넘어 생태계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에너지와 양분의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방법(2010, 군터 파울리) ◆ (비교개념) 환경이라는 공유자산을 소비하는 적색경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동일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녹색경제 <p>〈생태모방기술(Biomimic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생물체와 생태계의 구조, 원리 및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로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특성을 강조 ◆ (특성) 자연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생물학 기반과 이를 활용가능한 기술로 구현하는 공학적 설계·제조가 결합된 다학제적 융합연구 ◆ (비교개념)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여러 분야에 활용하는 광의의 자연영감(Nature-inspired), 단순한 기술문제 해결이나 유용 기술개발 중심의 생체모방(Bionics, Biomimetics) 등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최

자료 : 국토교통부·환경부(2018.10.2.)

-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개최, 10.2]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
 - ※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구성
 - ※※ (참석) 양 부처 차관 등 총 20인(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16인) /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정책관 / 환경부차관, 자연보전정책관, (민간) 시민사회, 학계, 환경·국토분야 관계전문가 16인
- (주요 내용)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을 제고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10.4.)

- [산업통상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개최, 10.4.] 10.4일 부터 124일까지 전국 12개 권역별로 전국 순회 개최

※ 전국 주요지역을 방문하여 통상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계기 설명회 이후 4년만으로,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이슈 및 활용은 물론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전반을 지역과 소통

- (주요 내용) △FTA 추진동향, 수입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FTA 활용촉진 및 무역조정 지원정책,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역 통상진흥 방안 등

|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권역별 개최 일정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부산/울산	제주
10.4. (서울상공회의소)	10.16. (수원상공회의소)	10.23. (원주상공회의소)	10.25. (충북기업진흥원)	11.2. (부산상공회의소)	11.7. (제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	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전북
11.9. (광주상공회의소)	11.14. (창원상공회의소)	11.20. (대구상공회의소)	11.22. (대전상공회의소)	11.27. (인천상공회의소)	12.4. (전주상공회의소)

※ 설명회 시간은 14:00~16:00시로 전 지역 동일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

자료 : 환경부(2018.10.4.)

- [환경부,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 10.4.] 2017년 6월부터 추진하던 4대강 16개의 보 개방과 ‘관측이하 모니터링’ 을 2018.10월부터 크게 확대, 그간 4대강 16개 보 중 10개* 보를 개방하여 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0.4일 한강 이포보를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 낙동강 7개 보를 개방

- (주요 내용) △이번 보 개방은 내년 양수장 가동 이전인 2019년 3월까지이며, 이후의 개방계획은 취·양수장 대책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 농민 등과 수위회복시기, 회복수위 등 협의를 거쳐 추후 수립될 예정, △농업용수 등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 없도록 탄력적으로 개방, △조사·평가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금강 및 영산강 수계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은 2018.12월 한강·낙동강은 2019년 중 마련

※ (완전개방 3개)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부분개방 6개)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 함안, 죽산보, 백제보, (수위회복 1개) 상주보는 관리수위 회복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개회식 개최

자료 : 기상청 · 외교부 · 인천광역시 · 환경부(2018.10.1.)

-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개회식 개최, 10.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의 개회식이 10.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135개국 정부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 총 570여명이 참석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5번의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총 195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 (주요 내용) 10.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한 문장씩 검토 후,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에 최종 채택 하고, 채택된 보고서는 올 12.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탈라노아 대화***의 주요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

※ 탈라노아 대화: ‘Talanoa’는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의 포괄적·참여적·투명한 대화 방식을 의미하며, 파리협정 장기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촉진하기 위한 대화의 장임. 2018년 연중 개최되며, 준비 단계와 정치적 단계로 나누어 진행

〈제48차 IPCC 개회식 환영사 주요 내용〉

- ◆ (문재인 대통령) 영상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 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어 더욱 강력한 국제적 실천을 결의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하면서,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
- ◆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난해 여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폭염, 홍수 등 극심한 기후영향이 자연의 경고를 입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 ◆ (김종석 기상청장)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는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을 언급
- ◆ (이화성 IPCC 의장)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IPCC의 과학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건설적이고 협력적 정신으로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
- ◆ (엘레나 마니엔코바 WMO 사무차장) 기후변화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더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말을 언급, WMO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극한 기후 등에 대한 기후변화 과학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 (유세프 나세프 UNFCCC 적응총괄국장) 지금까지 기후 대응 조치를 위한 과학이 이렇게 긴급한 적이 없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매우 기다리고 있음을 밝힘. IPCC 보고서가 UNFCCC의 중요한 시점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고,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UNFCCC는 IPCC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 지길 바란다고 언급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

자료 : 환경부(2018.10.4.)

□ 개요

-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10.4]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
 -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대상 품목 확대: 27종(기존)+23종(확대) → 50종

□ 개정안 주요 내용

-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RoHS) 품목에 추가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확대
 - ※ (추가 품목)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빙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
 -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하게 관리
 -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

㉔ 정책동향

□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도 추진
-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시스템’** 을 운영할 계획
 - 이에 따라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1일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 **10월 중순**에는 폐패널 긴급수거·보관 체계, 보관 장소,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서(매뉴얼)’** 를 지자체와 **태양광 사업자**에게 배포할 계획
- **2019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를 구축하여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
 - ※ 권역별(수도권·호남·영남) 환경공단의 폐기물 수거사업소를 확대 개편(2019~2021)
 -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 로 수거하여 재활용
 - ※ 서울특별시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 시범사업 추진(2019년~)
 -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 에서 수거하여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
-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도 추진할 계획

태풍 ‘콩레이(KONG-REY)’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0.4.) · 행정안전부(2018.10.4./10.5.)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태풍 ‘콩레이’ 농업재해 총력 대응지시, 10.4] 태풍 ‘콩레이(KONG-REY)’가 북상하면서 직·간접적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10월 4일 오후부터 제주·남해안 지역에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비 긴급회의를 개최(10.4)**하여 태풍의 이동 경로와 예상되는 **피해 및 대책을 점검**
 - (**피해 예상**) 지난 2016.10월 초에 발생한 태풍 “차바*”와 발생시기 및 이동경로가 유사하며,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
 - ※ 차바: 강도 강(최대풍속 39m/s), 크기 소형(강풍반경 250km) / 콩레이: 강도 중(최대풍속 32m/s), 크기 중형(강풍반경 370km)
 - ※ 차바로 인한 농업피해: 농작물 15천ha, 농경지 616, 농업시설물 88, 가축 44천 마리, 수리 시설 29개소 등(복구비 490억 원)
 - (**대책 추진상황**) △10월 3일 18:00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2단계(주의)**를 발령(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비상근무 체제 가동), △농업인에게 **태풍정보 제공, 농경지 배수로 정비 등 피해예방 요령 안내**
 - (**피해지원 대책**)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2017년 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피해가 심한 농가·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 (농약대) 과수류(종전 63만 원/ha → 인상 176), 채소류(30 → 168), 인삼(23 → 323) 등, (대파대) 과채류(종전 392만 원/ha → 인상 619), 엽채류(297 → 410) 등
 - ※※ 예시) 생계비 116만 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 원
 - ※※※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 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9%), 융자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행정안전부, 태풍 ‘콩레이’ 대비 비상체제 돌입 10.4]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10월 6일에서 7일 경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
 - ※ (일시/참석) 10.4일 17시/행정안전부 장관(주재), BH 위기관리센터, 기상청, 17개 시·도

㉔ 정책동향

- (주요 내용) 10월 4일 18시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를 발령하고 태풍의 영향이 있는 지자체의 대처계획을 점검
- [행정안전부, 태풍 ‘콩레이’ 대비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10.5] 제25호 태풍 ‘콩레이 (KONG-REY)’ 가 10월 6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총력 대응
 - ※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 제주도에 최고 5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 (주요 내용) 10월 5일 09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 에서 ‘경계단계’ 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함과 동시에 각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선제적으로 태풍에 대처

◆ 농업·농촌 동향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창구 전국으로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0.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창구 전국으로 확대, 10.1] 10월 1일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용어 설명 및 현황〉
<p>◆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여,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p> <p>※ 농업경영정보: 농업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농이력 등), 농지 정보(소재지, 면적, 재배 품목, 경영형태 등), 직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정보, 농산물 유통·가공 정보 등 56개 항목</p>
<p>◆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p> <p>※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현황: (2016) 70,084건 → (2017) 51,696 → (2018.8.) 38,453</p>
<p>◆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p> <p>※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현황: (2016) 481천 건 → (2017) 573 → (2018.8.) 1,195</p>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 개최

자료 : 농촌진흥청(2018.10.1.)

- [농촌진흥청, ‘농업용 드론 현장 페스티벌’ 개최, 10.1~2] 방제 작업을 비롯해 농업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출시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농업용 드론 생산 기업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일사·2018.10.1~2(2일간), △일정·(1일차) 국산드론 전시 및 연시 등*, (2일차) 농촌진흥청 드론 연구현황 학술대회***
 - ※ 기종별 전시, 농작업 연시, 관람객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
 - ※※ △국내 농업용 드론의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드론을 활용한 농업 관측, 예찰·방제 현황, △농업용 드론의 사고 유형과 안전한 사용법 안내 등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의견 공유

〈농업용 무인기 보급 현황〉
<p>◆ 국내 농업용 무인기 보급: 총 951대(드론 706, 무인헬기 2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2018.2월 말 기준) - 용도별(드론) 현황: 방제용 91.4% > 교육용4.8% > 시비·파종용 2.8% > 예찰용 0.7% - 지역별(드론) 현황: 전남 40.9% > 전북23.4% > 충남 12.2% > 경남 7.5% <p>◆ 드론관련 사업체 및 가격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자료(2017.6월 말 기준) - 드론판매 등 사업체 현황(대리점 포함): 총 1,235개 업체 - 농업용: 295개(비료·농약살포 294, 병해충 관측 1) 23.8% - 드론가격: 평균 2,000만 원~3,000만 원 ※ 용량: 10L, 입제살포(옵션)가능

㉔ 정책동향

◆ 식품 동향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0.2.)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 운영, 10.2]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부 3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농업·농촌 체험 교육과정**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을 운영
 - ※ 「지역주부 농업농촌 안전한 먹거리 체험교실」: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배우자 및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도에 처음 개설, 올해는 연 2회 운영되며 1기는 6.26일에 운영하였고 10.2일 2기 운영
- (주요 내용) △교육일자·2018.10.2(7시간), △교육대상·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부 30여명, △교육내용*...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홍보**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
 - ※ 특히,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교육과정 운영 시 원하는 교과 및 현장체험 의견을 공모하여 아이디어를 발굴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8.10.5.)

- [식품의약품안전처·(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10.5.]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 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 (향후 계획) 소비자에게 올바른 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방법,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

㉔ 정책동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책〉
<p>◆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 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p> <p>※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이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p> <p>◆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를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p> <p>※ 어린이 기호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p>

◆ 축산 동향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0.1.)

- [농식품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10.1]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18.10월부터 2019.2월까지(5개월간)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
 - ※ 과거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
 - (구제역)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백신 관리...일제접종(10월), 돼지에 O+A형 백신접종(O형 → O+A),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유사시 대비 항원뱅크 비축 물량 확대(170만 두 → 300), △취약분야 관리...백신미흡농장 현장 실습교육 확대, 교육 대상자별(농가·외국인·방역관) 맞춤형 홍보 동영상 제작, 축종별 간담회 개최
 - (AI) 위험지역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 △사전예방...예찰검사 확대, 위험지역 가축 사육제한,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반복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초기대응...발생 시 중앙 특별방역단 운영, 3km 예방 살처분, 발생지역 내 전통시장 가금 유통금지, AI 검사 강화(출하 시 사전검사, 도축장 검사 등)
 - (공통조치)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월 1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
 -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10.1일 농식품부 상황실 현판식 행사 개최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AI 차단방역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0.2.)

- [농림축산검역본부,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AI 차단방역 강화, 10.2]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 농가 및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2018년 10월 2일부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
 - ※ 철새 도래 경보 발령: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가금류와 철새 간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 한 것
 - ※※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총 4단계(도래 > 밀집 > 철새주의 > 해제)로 구분
 - (가금류 농가)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등 차단방역 철저
 - (지자체)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홍보 강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조하여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게 제공할 계획*
 - ※ 참고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8.10.1.일부터 2019.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 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계획 등 방역대책을 추진 중임.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8.10.5.)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10.4] 중국과 최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확산*과 관련, 10월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진사항 등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
 - ※ 2018.8.3일 중국 첫 발생이후 8개성으로 확산, 2018.9.13일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 (보완책 마련) ①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 ②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 원 → 500)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계획, ③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해 ASF 전수검사 실시(2018.10-12월), ④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 방지를 위하여 헨스를 설치, ⑤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

㉔ 정책동향

- (주의 당부사항) ①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②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C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③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④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

▣ 중국내 ASF 발생 현황(중국 농업농촌부 공식 확인 기준) ▣

연번	확진 일자	지역	사육 두수	폐사 두수	발생 장소	연번	확진 일자	지역	사육 두수	폐사 두수	발생 장소
1	2018.8.3.	요녕성 선양(1)	383	47	농장	12	9.6.	안휘성 무호(5)	30	4	농장
2	8.16.	해남성 정주(1차)	260	30	도축장	13	9.6.	안휘성 선성(6)	52	15	농장
3	8.19.	강소성 연운항(1)	615	88	농장	14	9.10.	안휘성 동릉(7)	219	23	농장
4	8.22.	절강성 낙청(1)	430	340	농장	15	9.14.	내몽골 석림맹(1)	16	16	농장
5	8.30.	안휘성 무호(1)	459	80	농장	16	9.14.	해남성 신행(2)	148	64	농장
6	9.2.	안휘성 선성(2)	725	134	2개 농장	17	9.17.	내몽골 석림맹(2)	159	8	농장
7	9.3.	안휘성 선성(3)	308	83	농장	18	9.20.	길림성 공주령(1)	484	56	농장
8	9.3.	강소성 무석(2)	97	9	농장	19	9.20.	내몽골 흥인맹(3)	138	22	농장
9	9.5.	흑룡강성 가목사(1)	87	12	농장	20	9.24.	내몽골 호화호특(4)	388	2	도축장
10	9.6.	안휘성 저주(4)	886	22	농장	21	9.28.	길림성 송원(2)	44	3	농장
11	9.6.	흑룡강성 가목사(2)	203	10	농장	22	10.1.	요녕성 영구(2)	378	102	5개 농장

이슈 브리프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제1508호, 2018.9.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개요>

- [농약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란?] 농작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목록을 작성하여 잔류허용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로 식품 수입량의 증가와 수입품목의 다양화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잔류농약 관리를 PLS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6년 일부 품목에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 정부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

- ※ 농약 허용물질목록제도: 농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를 적용

-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2019년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2018.2.22.)

- [PLS 제도 운영 목적] 지난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하여 발생한 피프론일 오염 달걀사건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둔 현재에도 농업계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주장

- [PLS 제도 국외 사례] 2006년 일본이 최초로 도입·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유럽연합이 도입·실시하고 있음. 미국, 호주, 캐나다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 '불검출 원칙*' 을 적용하는 'Zero Tolerance 제도' 를 운영하고 있음.

- ※ 불검출의 기준은 0.01ppm 이하임.

-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원칙적으로 규제(금지)된 상태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목록화한 것을 말하며, 농약, 동물용 의약품, 식품첨가물 등 의도적(intended use)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함.
-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원칙적으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목록화한 것을 말하며, 주로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

㉔ **아젠다 발굴**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도입 경과 및 시행 후 변화>

- 우리나라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포지티브시스템**을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월 2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호)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 참깨, 들깨, 밤, 땅콩, 아몬드, 호두, 올리브 등 견과종실류, 커피 원두, 카카오 원두, 콜라너트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 그리고 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에 적용하였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개정(2018.2.22.) 내용 >
제2. 3. 7 (1)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①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개별 기준과 그룹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별표 3]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0.01mg/kg 이하를 적용한다. ③ 「농약관리법」 상 사용등록된 농약 및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 성분은 아래 표와 같다. ㉠ 독성이 현저히 낮아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 ㉡ 식품에 전혀 잔류되지 않는 성분 ㉢ 자연계에 존재하여 해당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분이 어려운 성분 ㉣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 등 포함) 성분

- **현재**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기준(CODEX)**을 **적용**하거나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PLS 제도**가 **시행** 되면 **미등록 농약**의 경우 잠정기준 대신 **0.01ppm 이하의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게 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인 세계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1962년)하여 운영하는 국제적인 식품규격을 제·개정하고 관리함. 국제통상 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기준(CODEX)은 국제표준으로 사용됨.

- **직접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 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은 경우**, 생육주거나 연작 등 **작부체계**에 따라 전이된 **오염**, 그리고 **항공 방제** 등 **비산***으로 인한 **오염**인 경우도 **판매단계의 농산물**에서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됨.

※ 비산(drift): 농약이나 비료를 처리하는 경우에 미립자나 유효성분이 목표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을 말하며 입자 비산(particle drift or airborne drift)과 증기 비산(vapor drift)이 있음.

㉔ **아젠다 발굴**

▣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시행 전후 비교** ▣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농약사용기준		규제 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잔류농약검사기준	MRL 설정	기준 이하 적합	기준 이하 적합
	MRL 미설정	1순위) CODEX 기준 이하 적합 2순위) 유사작물 기준 이하 적합	일률기준(0.01mg/kg) 이하 적합

〈농약 허용물질목록(PLS)제도 전면 시행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 첫째, PLS 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에도 **소면적 재배 농작물의 등록 농약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식품·외식·급식업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성 농작물 재배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소면적 재배 작물이 1998년 상추, 들깨 등 16종에서 2017년 망고, 민들레, 썸바귀 등 120종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촌진흥청은 직권등록시험을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 84개 품목, 약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며, 일부 농업계에서는 **직권 등록 농약의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전면 도입 유보**를 주장
- 둘째, **2018년에 파종하는 월동기 농작물과 인삼, 도라지 등 장기 재배 품목의 농약 등록과 적용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음**.
 - 정부는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에 대한 **직권등록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 재배 근채류** 등의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5,377개의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 허용기준을 2018년 연말까지 설정**할 계획
 - 일부 품목의 **PLS 제도 적용 시기**는 **모든 품목에 원칙적으로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며, **장기 재배 작물은 ‘유통일’ 기준이 아닌 ‘수확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
- 셋째,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가 **신림청 등이 시행한 항공 방제**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생산지 인근 타 작물의 농약 살포**로 허용되지 않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와 **윤작, 타 작물 전환 등 토양 내 잔류한 농약성분**으로부터의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㉔ **아젠다 발굴**

- 정부는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은 인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확대하여 설정할 예정이며, 비산 등에 의한 오염은 농식품부와 산림청이 협조하여 시기를 예고하거나 수확시기를 피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
- 넷째, PLS 제도 도입 후 농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
 - 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진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다면 PLS 제도 도입 전에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2016년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경우 PLS 제도 도입 전·후 부적합 건수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
 - ※ 부적합 건수(2016/2017): 수입(12건/12건), 유통(2건/2건)

<개선과제>

-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한 항공 방제로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양자 간 피해 보상 및 소명 체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할 필요
 - 항공 방제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이 인근 생산물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 정부는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가 낮고, 새로 작권등록하는 농약에 대한 정보를 농민이 인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홍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
 - 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농약 판매상이 농약 판매 시 홍보하여 농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면 실시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
- 일본, 유럽연합과 같이 PLS 제도를 인착시키기 위해 시행한 방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PLS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 비산농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 비산의 폭을 줄이는 도구(설비), 비산 현상을 저감화 하는 농약이나 농약 보조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㉔ **아젠다 발굴**

- 또한 **일본, 미국, 유럽연합**과 같이 PLS 제도 정착에 필수적인 **잔류농약 시험법의 확립** 등 **신속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마무리〉

-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은 그동안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잔류농약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품목들의 잔류농약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한편,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수입농산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들을 잔류농약 기준으로 적용, 위반 시 처벌할 수 있음.
 - 또한, 국내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며, 잔류농약의 섭취량 및 노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사전 예방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활성화**하는 **기초**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PLS 제도는 **농약의 오남용**을 **근절**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종 작물**에 대한 **등록 농약**을 **확보**하여, **축산물, 수산물**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㉔ **아젠다 발굴**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배양육 관할권 조정 필요

※ IEG Policy에서 발표한 “Memphis meats, NAMI urge Trump to allow both FDA and USDA oversight of lab-based meats(2018.8.24)” 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배양육 관할권 조정 필요**

- **멤피스미트**(배양육 생산업체)와 **북미육류협회**는 2018년 8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양육의 상업화**를 위해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 양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서신을 발송함.
 - 현재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배양육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 중임.
 - 최근 식품의약국(FDA)이 생산자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농무부(USDA) 참석을 배제시켜 논란이 증폭된 상황임.
-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 식재료가 가공되어 시장에 출하되기 전까지는 식품의약국(FDA)의 관할이지만, 육류 등의 식재료 유통 단계는 농무부(USDA) 관할임. 이에 따라 배양육의 관할권 조정도 유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멤피스미트와 북미육류협회는 식품의약국(FDA)이 세포 배양기술 활용 제품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이용하여 **배양육의 시장 출하 전까지의 안전성 평가**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농무부(USDA)**는 육류와 가금류 제품 검사를 수행해 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장에 출하된 배양육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멤피스미트와 북미육류협회는 현재 미국은 **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축산물 생산**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정 및 제도**가 **명확**하게 **조정**되어야 **지속적인 선도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백악관,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배양육 관련 생산업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할 것을 제안함.
 - 이에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 현재 **국내**에서는 **배양육 생산**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본격적인 연구 개발 및 제품 출하 시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농무부의 배양육 관할권 갈등이 국내에도 재현될 여지가 존재함. 따라서 미국의 **관할권 조정사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㉔ 아젠다 발굴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글로벌 식품 포럼 주요 내용: 유럽연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

※ 유럽연합의 민간 싱크탱크 Farm Europe 홈페이지(<https://www.farm-europe.eu/>)에 게시한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글로벌 식품 포럼 주요 내용: 유럽연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

- 제3차 **글로벌 식품 포럼**(Global Food Forum)이 이탈리아 파비아에서 **2018년 9월 18일~19일** 동안 진행되었음. 정치·경제 분야의 리더들과 시민사회, 학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농업정책**을 포함해 **유럽연합 농정의 미래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세계 속의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하에서 **농식품 정책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
 -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농업 부문**에 대한 **위협 요인**임. 포럼에서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전환기**(transition period) 연장을 포함하여 **무역 교란을 제한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음.
 - 유럽연합은 **내부 수요 감소**에 직면하여 **시장 개척**이 **필요한 품목**들과 세계시장과 **경쟁**이 **불가능**해 **보호**가 **필요한 품목**들 간에 발생하는 **농업 내부 모순**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 관련 도전과제**
 -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유럽연합 식품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공동농업정책**과 같이 **다년간 재정 운용 계획**에 **수반**하는 **정책**의 경우 타이밍보다 **완성도**(quality)를 **우선**해야 함. 그리고 **공동농업정책**은 예산 제약 때문이 아닌 **농식품 체계를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회원국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집행 위원회**가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무효화**해서는 안 됨.
- **복원력(resilience): 불확실성 대처**
 - **직접지불제**는 **농업인 소득** 지지를 위해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이 **농업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방책**일 수는 **없음**.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식을

㉔ **아젠다 발굴**

설계해야 하며, 당면한 경제·환경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혁신, 교육, 환경 계획(eco-scheme)**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중간 수준의 변동성과 기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이 뮤추얼 펀드와 보험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유럽 연합의 개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기유보금(crisis reserve)**을 개혁해야 함. **위기유보금은 다른 위험 관리 도구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동**하되 **유연한 반응**을 보여야 함. 또한, **회원국의 특정 이익 추구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부문별 전략**

- **환경 규정은 공통적 경제 요인들과 함께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정의**해야 함.
- **유럽연합 정책 체계(framework)**는 **재무적 요인**(예: 직접지불금)과 **비예산적 수단들**(예: 단백질 전략,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포함해야 함.
- **혁신을 위해서는 강력한 투자 전략이 국가 혹은 지역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함.
- **국가적 혹은 지역 차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농촌 개발을 저평가**해서는 안 됨.

○ **기능적 식품 체인**

- 최근 **불공정관행(Unfair Trade Practices, UTPs)**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바람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업체(e-commerce)**와 같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춘 주체들을 **입법안**에 포함시키는 **폭 넓은 접근 방식**이 요구됨.
- **침해 절차(infringement procedure)**에 관해서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통적**이고 **명확한 접근**이 설계되어야 함.

㉔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정책 과제 등

※ 일본 농림중공업연구소 농림금융 「農業競争力強化に向けた制度改革と農業政策の課題」(2018.1), 일본 농연기구 「人工知能とデータ連携基盤を統合した農業情報研究センターを開設」(2018.9.27.)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정책 과제**

- 2017년 정기국회에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한 8개의 법률(농업경쟁력강화 관련법)이 통과됐음. 이에 따라 향후 한층 더 농업 생산성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농업경영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률은 1992년에 책정된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정책의 방향」(「新しい食料・農業・農村政策の方向」)(신(新)정책)과 1999년에 성립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食料・農業・農村基本法)」(신(新)기본법) 이후의 농업정책에서 지향해 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다양한 후계자와 농촌진흥을 중시하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음.
 - 신정책과 신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정책에서 산업정책이 중심이 되는 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생선의 기반이 되는 농촌을 중시하는 두 가지의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 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정책에 편중되어 있음.
 - 두 개의 축은 쌀 정책 등에서 어느 정도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2010년에 TPP 참여 표명을 전후로 농업정책이 산업 경쟁력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음.
- 최근 농업정책은 산업정책적인 경향이 강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를 내세워 법 개정 및 신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경쟁력강화 관련법도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정권 농업정책에서는 관저 주도로 농업정책의 규제개혁회의(2016년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회의로 개편)와 산업경쟁력회의(2016년 9월부터 미래투자회의로 개편)가 관여하여 더욱 산업정책의 성격이 강해졌음.
 - 2013년 12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활력창조플랜(活力創造プラン)에서는 TPP 참여를 전제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농업 참여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더욱 산업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나옴.
- 농업경쟁력강화법 성립 후 「농림수산업·지역활역창조플랜」의 3차 개정도 진행되었으며 「규제」 개혁에 치우친 움직임이 더욱 기증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산업적인 농업정책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농업경영의 성장에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식량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기본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㉔ **아젠다 발굴**

- 최근 일본의 농업정책에서는 **판로의 국내외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농업 경영만을 중심으로 후계자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농업경영만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실현할 수 없다**고 간주함

㉕ **농업정보연구센터 개설**

- 농연기구는 **농업·식품산업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연계 기반을 종합한 농업정보연구센터**를 **2018년 10월 1일** 개설함.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스마트화와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 농연기구는 정부가 내세우는 **초(超)스마트 사회 「Society 5.0」**에서 **농업·식품분야 실현**을 위해 농업정보연구센터를 개설하였음. 센터의 **목적**은 다음의 **3가지**로 볼 수 있음.
 - 1) 최신 **AI 기술, 농업 데이터 연계기반**으로 **정비**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연기구의 독자적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 AI 연구 추진**
 - 2) **농업데이터 연계기반의 장기안정운용**을 목표로 **연구 및 운영체제 구축**
 - 3)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중심**으로 한 **ICT 인재 육성**
- 출범 시 직원 수는 약 30명(연구직 23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내에 50명**으로 **확대**할 예정
 - 농업 AI 연구와 농업데이터 연계기반연구의 **연구추진 책임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 향후 **민간 기업**의 **연구자**도 **받아들일 예정**이며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및 **주요 대학**과의 **연계**도 추진
- 농업·식품분야에서 「Society 5.0」의 형태인 **스마트 푸드 체인**(육종에서 생산·가공·유통, 소비까지) 각 **과정**의 **전략적 과제**에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함.
 - **AI 기술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농연기구 내의 각 **연구 센터**에 **AI 기술 보급**함. 이에 따라 농연기구내의 **연구자**의 **약 10%(200명)**가 **높은 IT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스마트 푸드 체인**에서 특히 **중요**한 **약 30가지 과제**를 **중점 AI 과제**로 **선정**하여 **해결**함으로써 스마트 푸드 체인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낭비감소, 총비용 삭감, 농작물·식품의 부가 가치화** 등을 **실현**해 나감.
 - **농업 AI 연구 성과**를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을 통해 **산업계, 농업계**에 **빠르고 폭넓게 제공**하여 농업계의 **신속한 「Society 5.0」 실현**에 공헌하고자 함.

㉔ 아젠다 발굴

연론 동향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 우려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 우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올해 쌀 생산량 383~387만 톤 전망] 한국농촌경제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97만 톤보다 27~3.6% 감소한 383~38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벼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 상황 저조**에 따른 전체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전국적으로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전남 지역은 6천40ha 감소해 감소 규모가 가장 컸고, 전북과 경남이 각각 3천700ha 2천200ha 감소해 뒤를 이었음.
 - ※※ 벼 생육 상황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저조
- (쌀 생산량) 2009년 492만 톤을 기록한 뒤 2013~2015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쌀 생산량이 줄면서 2017년 수확기 평균 쌀값은 15만 3천 원(전년 대비 18%↑), 최근에는 18만 원 육박
- (벼 재배 면적) 73만 8천ha로 지난해 75만 5천ha보다 2.2% 감소, 벼 재배 면적 감소율은 지난해 (-3.1%)와 최근 5년 평균(-2.3%)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쌀 가격 상승세와 함께 기상 악화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여의치 못해 벼 재배로 돌아온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
- (1㎡당 벼알 수) 3만 3,531개로, 지난해 3만 3,935개보다 1.2% 감소 (10a당 생산량) 519~524kg으로 전망돼 지난해 527kg보다 줄어들 전망
- 2018년 하반기에 정해질 쌀 변동직불금(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도 쌀값에 영향을 줄 전망

자료: “올해 쌀 생산량 385만 톤으로 줄 듯...쌀값 더 오른다” (KBS, 2018.9.30.),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고공행진 우려” (YTN, 2018.9.30.), “벼 생산량, 지난해 보다 줄어든 387만t 전망...쌀값 오를 듯” (아시아경제, 2018.9.30.), “올해 쌀 생산량 385만t 예상...쌀값 끝없는 ‘고공행진’ ” (연합뉴스, 2018.9.30.),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 우려” (국민일보, 2018.10.1.), “쌀값 나머지...폭염·폭우로 생산 줄어 오름세” (중앙일보, 2018.10.1.)

통계·조사 토양·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자료 : 환경부(2018.10.4.)

☐ 개요

- [환경부, 토양·지하수 중 농약성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4] 토양 및 지하수를 대상으로 농약성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 (조사지점) △토양·전국 농경지 토양측정망 중 110개 지점과 지난해 ‘디클로로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이하 DDT)’가 검출*된 경산·영천시 40개 지점의 농경지 등 총 150개 지점, △지하수·토양시료 채취지점 인근에 위치한 62개 지점
 - ※ 경산·영천의 산란계 농장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046~0.539mg/kg 검출(2017.8.28,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조사대상) 사용이 금지된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 15종과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5종 등 총 20종

☐ 주요 내용

- DDT, 토양 중 검출농도는 불검출~2.2mg/kg 범위 이내, 평균농도는 0.023mg/kg 수준이었고, 지하수에서는 불검출
 - 캐나다 환경장관위원회(CCME)에서 농경지 안내지침으로 제시하는 0.7mg/kg을 적용*할 경우, 총 150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하는 2개 지점의 농산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에서는 DDT***가 ‘불검출’ 되어 안전한 것으로 확인
 - ※ 캐나다: 농경지·주거지 0.7mg/kg, 미국: 주거지 7mg/kg, 독일: 주거지 80mg/kg, 호주: 주거지 240mg/kg(미국·독일·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지 기준은 없으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 여부 확인)
 - ※※ 국내에서 1973년 사용이 금지된 DDT는 토양 중에서 1/10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DDT 외 14종의 유기염소계 농약은 일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서 미량 검출되었으나, 국외 토양 환경관리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기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
 - (토양) 클로르데인(최고 0.01mg/kg), 헵타클로르(최고 0.0052mg/kg), 인도살핀(최고 0.31mg/kg) 등 3종의 검출농도가 다른 유기염소계 농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국외 토양환경 관리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

㉔ 통계·조사

- ※ 클로르데인(미국 주거지 2mg/kg, 호주 주거지 50mg/kg), 헵타클로르(미국 주거지 0.1mg/kg, 호주 주거지 6mg/kg), 엔도설판(미국 주거지 470mg/kg, 호주 주거지 270mg/kg)
- (지하수) 디엘드린(최고 0.0035 μ g/L), 헵타클로르(최고 0.0008 μ g/L), 엔도설판(최고 0.0051 μ g/L) 등 3종이 검출되었으나, WHO에서 제시한 먹는물 지침값이나 제안값*보다 낮은 수준
- ※ (디엘드린) WHO 먹는물 지침값 0.03 μ g/L, (헵타클로르) WHO 먹는물 제안값 0.03 μ g/L, (엔도설판) WHO 먹는물 제안값 20 μ g/L
- 살충제 5종 중 토양에서 비펜트린(최고 0.12mg/kg)과 플루페녹수론(최고 0.24mg/kg) 2종이 적정살포 시 토양에 잔류할 수 있는 농도 범위* 이내로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무검출
- ※ 제품 형태별 살포방법, 사용량, 사용횟수 등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출처: 농촌진흥청): 비펜트린 0.08mg/kg~0.24mg/kg, 플루페녹수론 0.1mg/kg~0.5mg/kg
- 향후 농약성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양 오염물질 지정,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

▮ 농약성분 실태조사: 유기염소계 농약(15종) ▮

항목	토양		지하수	
	검출농도		검출농도	
	최소~최대(mg/kg)	평균(mg/kg)	최소~최대(mg/kg)	평균(mg/kg)
알드린(Aldrin)	N.D.~4.2 $\times 10^{-5}$	4.8 $\times 10^{-7}$	N.D.	N.D.
디엘드린(Dieldrin)	N.D.~2.7 $\times 10^{-3}$	2.9 $\times 10^{-5}$	N.D.~3.5 $\times 10^{-6}$	5.6 $\times 10^{-8}$
엔드린(Endrin)	N.D.~9.4 $\times 10^{-5}$	1.1 $\times 10^{-6}$	N.D.	N.D.
디디티(DDT)	N.D.~2.2	2.3 $\times 10^{-2}$	N.D.	N.D.
클로르데인(Chlordane)	N.D.~1.0 $\times 10^{-2}$	1.7 $\times 10^{-4}$	N.D.	N.D.
헵타클로르(Heptachlor)	N.D.~5.2 $\times 10^{-3}$	7.0 $\times 10^{-5}$	N.D.~8.0 $\times 10^{-7}$	2.6 $\times 10^{-8}$
미렉스(Mrex)	N.D.	N.D.	N.D.	N.D.
헥사클로로벤젠(HCB)	N.D.~1.0 $\times 10^{-3}$	7.5 $\times 10^{-5}$	N.D.	N.D.
α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HCH)	N.D.~1.2 $\times 10^{-3}$	2.2 $\times 10^{-5}$	N.D.	N.D.
β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HCH)	N.D.~1.2 $\times 10^{-2}$	1.5 $\times 10^{-4}$	N.D.	N.D.
린단(Lindane)	N.D.~1.1 $\times 10^{-3}$	1.5 $\times 10^{-5}$	N.D.	N.D.
δ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HCH)	N.D.~1.6 $\times 10^{-4}$	5.7 $\times 10^{-6}$	N.D.	N.D.
펜타클로로벤젠(PeCBz)	N.D.~1.6 $\times 10^{-3}$	6.3 $\times 10^{-5}$	N.D.	N.D.
엔도설판(Endosulfan)	N.D.~3.1 $\times 10^{-1}$	1.2 $\times 10^{-2}$	N.D.~5.1 $\times 10^{-6}$	1.5 $\times 10^{-7}$
클로르데칸(Chlordecone)	N.D.	N.D.	N.D.	N.D.

N.D.: (토양) 불검출(검출한계 2.0 $\times 10^{-5}$ mg/kg 미만) / (지하수) 불검출(검출한계 5.0 $\times 10^{-7}$ mg/L 미만)
 디디티: p,p' -DDE, p,p' -DDD, p,p' -DDT, o,p' -DDE, o,p' -DDD, o,p' -DDT의 합
 클로르데인: cis-chlordane, trans-chlordane, oxy-chlordane과 cis-nonachlor, trans-nonachlor의 합
 헵타클로르: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의 합
 엔도설판: Endosulfan- α , Endosulfan- β , Endosulfan-sulfate의 합

㉔ 통계·조사

▣ 농약성분 실태조사: 살충제(5종) ▣

항목	토양		지하수	
	검출농도		검출농도	
	최소~최대(mg/kg)	평균(mg/kg)	최소~최대(mg/kg)	평균(mg/kg)
피프로닐(Fipronil)	N.D.	N.D.	N.D.	N.D.
비펜트린(Bifenthrin)	N.D.~ 1.2×10^{-1}	2.0×10^{-3}	N.D.	N.D.
에톡사졸(Etoxazole)	N.D.	N.D.	N.D.	N.D.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N.D.~ 2.4×10^{-1}	2.0×10^{-3}	N.D.	N.D.
피리다벤(Pyridaben)	N.D.	N.D.	N.D.	N.D.

N.D.: (토양) 불검출(검출한계 0.001~0.003 mg/kg 미만) / (지하수) 불검출(검출한계 0.003~0.006 mg/L 미만)

〈주요 용어 설명〉

- ◆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 1939년 개발되어 1945년 이후에 농업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내분비계 교란물로 밝혀지면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1971년 농약 허가가 취소(보건용은 1973년 금지)된 이후에는 국내 농약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됨.
- ◆ **(인체노출량)** 토양 내 존재하는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하여 노출시나리오(섭취, 접촉 등 노출경로별 노출 기간 적용)에 따른 인체의 일일노출량(mg/kg/day)
- ◆ **(일일섭취허용량)**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일인당 일일 최대 섭취할 수 있는 양 (mg/kg/day)
- ◆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등 조사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